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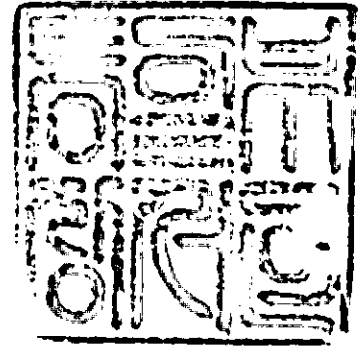
목 차

I.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9.15~18) 합의 내용

II.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와 의의

III. 세부 실천사업 내용

1.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3. 개성공단 건설
4. 금강산관광 육로연결 및 관광 활성화
5. 남-북-러 철도 연결
6. 남-북-러 가스관 연결
7.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허용
8. 임진강 수해 방지
9. 경제협력 4개 합의서 발효
10. 동해어장의 공동이용
11. 태권도 시범단 교환



I.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9.15~18) 합의 내용

-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

1. 당국간 대화·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
2.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
3.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당국간 회담 개최
 - 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곧 착수,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
 - ②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빠른 시일내 실무접촉 개최
 - ③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10.4)
 - ④ 남-북-러 철도 연결 협력과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
 - ⑤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를 협의하기 위해 해운 실무접촉 개최
 - ⑥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대책을 위해 11월중 현지조사 착수
 - ⑦ 경협 관련 4개 합의서 빠른 시일내 발효
 - ⑧ 동해어장 공동이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개최
 - ⑨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및 실무협의회 개최
4. 태권도 시범단 교환 (10월 북측 시범단 남측 방문, 11월 남측 시범단 북측 방문)
5. 제6차 장관급회담 개최(10.28~31)

Ⅱ.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와 의의

-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쌍방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
 - 지난 6개월 동안의 소강상태를 극복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상호 확인
 - 특히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
- 다양한 분야별 회담 개최 합의로 남북 당국간 회담의 연속성 유지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및 빠른 시일내 분야별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여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momentum) 확보
- 합의는 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남북협력사업의 실질적 이행에 착수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수, 금강산 육로 개설을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활성화 토대 마련
- 국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공헌
 -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발생 등 위기적 국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많은 부분에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후 달라진 남북관계를 체감
 -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결과로 평가

Ⅲ. 세부 실천사업 내용

1.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의 미>

-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인 동시에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적 징표
 -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이산 1세대들이 노령화하고 유명을 달리해감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이산가족 현황>

- 1950~53년 전쟁으로 인해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산가족이 발생,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남·월북, 탈북 등으로 이산가족 발생
- 2000년 말 기준 남한내 이산 1세대는 약 123만명, 이중 60세 이상은 약 69만명으로 추정
-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00년말 기준 약 11만 4천명

<추진 경과>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이래 3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실시, 오는 10.16~18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예정
 - 1차 : 2000.8.15~8.18, 남측 100명 → 북측 가족 218명 상봉(평양), 북측 100명 → 남측 가족 750여명 상봉(서울)

- 2차 : 2000.11.30~12.2, 남측 100명 → 북측 가족 254명 상봉(평양)
북측 100명 → 남측 가족 770여명 상봉(서울)
- 3차 : 2001.2.26~2.28, 남측 100명 → 북측 가족 243명 상봉(평양)
북측 100명 → 남측 가족 800여명 상봉(서울)
- 4차 : 2001.10~10.18(예정), 남북 각기 100명씩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1985년 이후 15년만에 재개

○ 생사 및 주소 확인은 총 10,213명(생존 6,142명, 사망 4,071명)

-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통해 2,267명, 3차례의 방문단 교환을 통해 7,946명

○ 서신 교환 실시는 남북 각 300명씩 총 600건(2001.3.15)

○ 남북은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설치장소 등 구체적 사항이 미합의

- 우리측은 ▲경의선 연결지점에 항구적 면회소 설치 ▲ 그 이전에 판문점·금강산에 임시면회소 설치를 제의

- 그러나 북측은 ▲우선 금강산에 면회소 공동 건설 ▲추후 경의선 연결지점에 항구적 면회소 설치 가능 입장을 고수

< 추진 방침 >

○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행사는 3차례의 경험을 토대로 상봉 위주로 차분하고 내실있게 추진

○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생사확인, 서신교환 규모 확대와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

•

•

2.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의 미>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고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하는 의미
 - 육로를 통한 수송으로 남북경협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비가 절감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북한 개성공단 지역에서의 임가공 활성화,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직접투자로 전환되는 계기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사례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간 긴장완화를 촉진
- 특히 경의선 철도가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부상, 중국 및 시베리아의 자원 개발 및 활용에도 기여

<연혁 및 현황>

-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
 - 1~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서울-신의주)철도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2000.9.1)
 - 2000.9.18 우리측 기공식, 지뢰 제거 등 공사 착공

•

-

•

•

•

•

•

- 철도는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24Km, 도로는 통일대교 북단에서 개성까지 17.1Km 연결
 - 우리측 구간(철도 12Km, 도로 5.1Km)은 우리가, 북측 구간(철도·도로 12Km)은 북측이 공사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비무장지대(DMZ) 및 군사분계선상에서 진행되게 되므로
 - 남북군사당국자간 협의를 갖고 지뢰제거 범위 등 군사적 실무문제도 협의
- 2001. 2. 8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 비무장지대 공사 추진 토대 마련
 - 그러나 북측이 「군사보장합의서」 서명·교환을 미루고 있어 비무장지대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우리측 지역 공사는 비무장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공
 - 북측은 2000년 동절기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나, 북측 철도 공사 구간은 대부분 논밭으로 대규모 인원 투입시 수개월내 공사 완료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는 데 따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착수,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키로 합의

<추진 방침>

- 남북간 「군사보장합의서」가 서명·교환되어 발효되는 대로 비무장지대 공사에 착수할 계획
- 가급적 준공과 동시에 열차 및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남북간 통행 방법 등도 협의

■

■

■

■

■

■

■

■

■

■

■

■

■

3. 개성공단 건설 사업

<의 미>

- 개성공단에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되면 남북경제협력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는 의미
 - 우리 경제, 특히 신발·섬유 등 사양산업의 활로를 찾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기여
- 남북경협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중요한 계기

<연혁 및 현황>

- 1998년 6월 우리측 현대아산과 북측 민족경제연합회(민경연)는 서해안 공단조성사업에 대해 논의
- 1999년 10월 1일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안 공단조성사업에 대한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 현대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간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 체결
- 2000년 8월 9일 정몽헌 현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개성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 현대-아태간 관련 합의서 체결(8.20)
- 2000년 11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단개발을 공동 시행키로 합의, 1단계로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100만평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 실시
- 2000년 12월 현대는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특별법 제정에 참고하도록 “국제자유지대경제법’ 시안을 북측에 전달

<추진 방침>

- 우리 기업들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당국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
 - 투자보장 등 경협 관련 4개 합의서 발효 및 통행·통신·통관 등 공단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고용·임금·세제혜택·송금 등 공단에 입주하는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도록 추진
- 개성공단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북측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

•

4.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로관광

<의 미>

- 금강산관광은 1998년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 위기감이 확산되었을 때와 1999년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을 때에 위기감 또는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
- 향후 금강산관광 육로(동해안 7번 국도)가 연결되면, 강원도 고성에서 약 30분, 설악산 입구에서 약 1시간 30분이면 금강산에 도착하는 등 관광이동시간이 단축되고, 관광비용이 줄어 들 것
 - 관광용 육로가 비무장지대를 열고 휴전선을 통과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기여하는 효과
- 또한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금강산 지역내 해수욕장,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 등 다양한 편의·위락 시설 설치가 가능
- 육로교통과 관광특구 지정 등에 힘입어 금강산이 세계적 관광지로 본격 개발되면, 남과 북은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될 것

<연혁 및 현황>

- 1998년 6월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이후 현대와 북측 아태는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대한 합의서 체결(1998.10)
-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 관광객은 첫 출항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2001년 9월 현재 약 42만여명 관광

▲

∨
∴
▲

∨
∴
▲

∴
∴
▲

- 총 4척의 관광선이 매일 운항하였으나, 2001년 상반기부터 설봉호 1척만이 운행중
- o 그동안 현대가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 ▲ 사업 초기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 ▲ 관광의 불편함으로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 ▲ 현대가 북측에 지불하기로 한 관광대가가 과도했고
 - ▲ 현대 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평가
- o 2001년 6월 8일 현대와 북측 아태는 난관에 부딪친 금강산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육로관광 실시 ②관광특구 지정 ③관광객 수에 따른 대가 지급 등에 합의
- o 2001년 6월 20일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 사업에 참여
 - 7.31 현대와 관광공사간 실무추진위 구성(수익률 배분문제 등 협의)
- o 2001년 6월 29일 정부는 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의결
- o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추진 방침>

- o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경협차원에서 추진
 - 투자유치 등 관광개발 문제는 사업주체가 경제논리에 따라 해결
 - 금강산 관광특구법 제정 등 현대와 북측 아태간 합의의 조속한 이행 촉구
- o 남북당국간 회담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당국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 협의·해결
 - 육로개설(7번국도) 등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

•

•

•

•

•

•

•

•

•

•

5. 남-북-러 철도 연결

<의 미>

- 남북간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가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가교로서 물류중심지가 되는 효과
 - 유라시아 대륙간 수송시 현재 해운수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
 - 시베리아의 자원 개발 및 활용에도 기여

<추진 배경 및 현황>

- 북-러 정상회담(2001. 8)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 연결 문제 협의
 - 철도 연결과 관련된 러시아측의 타당성 조사 시작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러 철도 연결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

<추진 방침>

- 우선 남-북간 철도 연결 후 사전 공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한반도-시베리아 철도 연결 추진

A

-
:
-

-
:
A

-
:
A

6. 남-북-러 가스관 연결

<의 미>

-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관이 중국, 북한을 통과하여 우리측에 연결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이익
 -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매장량은 8억5천만톤 수준으로 국내에는 연간 700만톤의 천연가스를 30년동안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북측은 공사에 따른 고용 창출과 통과 수익(연간 약35만톤) 확보 예상

<추진 배경 및 현황>

- 2000년 11월 2일 한-중-러 3국은 이르쿠츠크 PNG(Pipeline Natural Gas) 사업과 관련한 협정서 체결
 - 이르쿠츠크 PNG 사업은 2008년까지 가스전 개발 및 배관 건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대형 사업
 - 총 사업비 약 110억달러, 배관 총 연결거리 약 4,000Km 예상
- 2001년 2월 5일 한국가스공사는 북측에 이르쿠츠크 가스관의 북한통과 관련 사업제안서를 전달
- 한국가스공사와 북측 민족경제연합회는 가스관 통과 사업의 타당성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2001.9.5~9.8, 평양)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가스관 연결 사업 검토에 합의

<추진 방침>

- 우선 민간차원에서 타당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한·중·러간 합의 결과에 따라 검토
 - 가스관 북한 통과는 여러 대안중의 하나이며 북한측의 협조가 관건

▲

7. 민간선박의 영해 통과

<추진 배경>

- 2001년 6월 2일~4일 북측 상선 4척이 사전통보 없이 우리측 영해 통과
 - 6월 3일 국방부 대변인 경고성명 발표, 6월 4일 통일부장관 대북서한 발송, '무단통과시 강력대처, 사전 신고시 영해통과 허용' 방침 전달
 - 6월 5일 이후 북한 상선은 우리측 영해를 우회하여 통과
- 현재 남북간 선박운항은 남북 당국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관행에 의존하여 운항
 - 우리측 선박이 남북간 운항시 통일부의 승인과 북측의 입항허가를 받아 운행(2001년 상반기, 편도 기준 총 982회)
- 한편, 북측이 2000년 11월부터 인천~남포간 정기화물 운송선사인 한성선박의 화물선에 대해 명백한 이유 없이 입항 및 선적을 거부, 남북간 경협물자 수송에 장애를 초래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 갖기로 합의

<추진 방침>

-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간 합의 추진
 -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 통과, 안전 보장, 긴급 대피 등 포함

•

8.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의 미>

- 최근 수년간 남북 모두 임진강유역 홍수로 인해 큰 피해 발생
 - 최근 4년간 우리측에서는 2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 1조 6천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
 - 북측의 경우 1999년 한해동안에도 주택붕괴 수십만호, 농경지 침수 수십만 정보의 피해 발생 추정(북측은 정확한 통계 미발표)
 - 이는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수 사업으로는 한계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함께 하는 치수사업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남북이 함께 잘사는 터전을 만들어 가는 공동 이익사업

<연혁 및 현황>

- 1999년 8월 11일 우리 정부는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
- 2000년 9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과 김용순 특사 방문시 남북은 조속한 시일 내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 2000년 12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의 추진 의지 재확인·논의

•

- 2001년 2월 21일-24일 평양에서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개최
 - 조사단 구성 및 대상, 방법 등에 의견 접근
 - 구체적 조사 시점, 홍수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왕래절차 등 세부사항은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과 제2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
-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 2001년 11월중 임진강유역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 합의

<추진 방침>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개최, 공동조사단 구성 등 실무문제 타결 추진
-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수해방지 대책을 위한 정보교환 등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장기적으로는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수자원 협력 확대도 모색

▲

●
●
■

●
●
●

●
●
●

●
●
▲

9. 경제협력 관련 4개 합의서 발효

<의 미>

- 남북관계의 정치적·이념적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
 -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남북경협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
 - 투자보장의 경우,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송금·출입·체류 등 상대 지역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
 - 청산결제의 경우,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등을 규정
 - 이중과세방지의 경우, 사업소득·이자·배당·로열티 등 과세대상 소득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하여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 또한 조세정보의 교환, 조세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등도 명시
 - 상사분쟁해결의 경우, 공동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연혁 및 현황>

-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에 대해 정하기로 합의

-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채 남과 북은 각각의 법제와 민간 당사자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경제교류협력을 추진
-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2000.9)
 - 이후 남북은 두차례 경험실무접촉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타결하고 이어 가서명(2000.11.11)
-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4개 경험합의서 정식 서명(2000.12.16)
 - 4개 경험합의서는 남북 각자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
 - 우리측은 조약방식으로 발효 추진, 2001.6.1 국회에 상정되어 2001년 9월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사중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4개 경험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기로 합의
- 또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26일 개최기로 합의

<추진 방침>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4개 경험 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
 -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청산결제 은행 지정, 청산결제 품목·한도 등 후속조치도 협의·추진

4

4

4

4

4

10. 동해 어장 공동 사용

<의 미>

- 민간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어업협력 문제를 정부 당국간 협의를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연혁 및 현황>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에서 북측은 동해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동해어장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개최 합의

<추진 방침>

- 북측이 제공하는 동해 어장의 경제성과 조업 용이성 등을 검토, 어업분야 협력을 추진
 - 전체 어민들과 수협 등 어민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
- 중장기적으로는 어로활동 보장 등 남북간 어업관련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도 모색

•
•
•

•
•
•
•

•
•
•
•

•
•
•
•

•
•
•
•

11. 태권도 시범단 교환

<의 미>

-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는 남북 주민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
- 우리 민족의 대표적 전통 무예인 태권도 교류가 추진되면 스포츠 분야에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
- 국제무대에서는 우리측 주도의 세계태권도연맹(WTF)과 북한측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
 - 우선 시범단 교환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나아가 국제 태권도계에 남북협력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연혁 및 현황>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에서 태권도 시범단 교환에 합의
- 2001년 3월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의 방북시 태권도 시범단 교류 재확인
- 2001년 6월 우리측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방북시에도 태권도 시범단 교환 조속 실시 합의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태권도 시범단 방한을 금년 10월, 우리측 시범단 방북을 11월에 하기로 합의

<추진 방침>

- 태권도협회 등 관련 기관간 실무협의를 통하여 태권도 시범단 교류에 따른 세부 절차 문제 협의

11

12

13

14

15